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 제1463호 | 2018년 5월 8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이내영 | www.nars.go.kr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전망

이 승 현 *

1. 들어가며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진행하고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다. 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비핵화’를 둘러싸고 남북한 간의 합의 수준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질지 초미의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 한다는 내용을 문서화하는 선에서 타결되었다.

회담 종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 아베(安倍晋三) 총리, 푸틴 (Vladimir Putin) 대통령과 통화하여 ‘판문점 선언’을 설명하며 주변국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이후 전개될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비하고 있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5월), 북미 정상회담(5월 혹은 6월)이 예정되어 있고, 북일 정상회담 및 북러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 되는 등 동아시아 정세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글은 세계의 주목을 끌며 진행된 제3차 남

북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전개될 방향을 전망함으로써 ‘판문점 선언’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

이번 선언의 내용은 크게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남북관계 개선, 둘째,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셋째, 평화체제 구축을 주요한 기둥으로 삼고 있다.

(1)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

남북은 공동번영을 위하여 ‘민족자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관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선언, 6·15공동선언 그리고 10·4선언에 이르기 까지 이미 남북간에 채택된 선언과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재확인하였다.

기존 합의의 이행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 고위급에서 실무급에 이르는 회담을 진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할 것도 약속하였다. 특히,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미 정상회담 혹은 남·북미·중 정상회담도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첫 번째 제도적 장치로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남북한의 당국자가 상주하며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관계개선의 실천사업으로 철도와 도로의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6·15를 맞이하여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하고,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친척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그동안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된 사안들부터 풀어나가기로 한 것이다.

(2) 군사적 긴장의 완화와 전쟁위험의 해소

남북한은 5월중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방부 장관회담과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줄여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군사회담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의제로는 남북상호간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서해 북방한계선을 평화수역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우선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번 정상간 합의에 의하여 5월 1일부터는 확성기방송과 전단살포를 중지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출발점으로 비무장지대²⁾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여 궁극적으로는 평화지대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3)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은 상호 불가침의 재확인, 단계적 군

2) 정전협정(1953년)에 근거하여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2km에 설치된 띠 모양의 지역으로서 파주시 정동리부터 강원도 고성군 명호리에 이른다. 이 지역에는 개인 소화기 외에 무장력을 반입할 수 없는 ‘비무장’이 원칙이다. 북한이 무반동포, 고사총 등 중화기를 반입했고, 우리도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기관총 및 고속유탄 기관총 등을 반입하여 ‘중무장’ 지대가 된 바 있다.

축,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그리고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하였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³⁾가 남북한의 공동의 목표임을 문서로서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이 취하고 있는 선제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의의가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최종적인 결과물로서 평화체제 구축을 설정하였다.

또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한반도를 정전상태로 규정하고 2018년에 종전선언을 거쳐 관련 국가들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로드맵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남·북·미의 3자회담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남·북·미·중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추진하기로 약속하였다.

3. ‘판문점 선언’에 대한 반응과 전망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직후 이에 대한 다양한 국내외의 반응이 언론상에 보도 되기 시작했는데, 크게 보면 비판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국내외의 반응

비판적 반응은 ‘위장평화쇼에 불과’ ‘어처구니 없다’ ‘엄청난 가시밭길이 놓여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비판의 핵심은 북한이 그 동

3) 국제사회가 북한에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 방식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를 통한 비핵화이다. 비핵화는 핵무기를 제조, 시험, 배치, 사용하지 않으며, 농축시설과 재처리 시설도 가지지 않는 것을 뜻한다.

안 유사한 합의를 많이 하였지만 이행단계에서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번 합의도 결과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긍정적인 반응으로는 ‘역사적인 선언’ ‘코리아 프로세스의 탄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대외적인 반응 중에서 먼저, 중국 외교부는 적극적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성공이라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러시아는 ‘아주 긍정적 소식’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일본은 회담 결과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향후 관련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지를 관망하겠다는 복합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해외 반응 중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반응이 가장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종말을 맞이할 한국전쟁’(KOREAN WAR TO END!)이라고 대문자로 적고 미합중국과 모든 위대한 미국국민들은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긍지를 느껴야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 향후 전망

‘판문점 선언’에 대한 반응이 긍정에서부터 비판적인 것 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 선언의 미래는 합의 내용의 ‘이행’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향후 전망을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그리고 평화체제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첫째, 남북관계 개선은 한·미의 대북 압박정책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6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6·15 남북 공동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8·15를 전후로 예정된 이산가족·친척 상봉행사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사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준비되고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의 감소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합의사항 중에서 남북간 합의를 통해 기술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살포 약속은 바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 관련 나머지 의제들은 대개 신중하고 장기간에 걸쳐 협의되고 진행될 사안들이라 판단된다. 예컨대, 장기적으로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⁴⁾한데 이러한 사안들은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의제들과 마찬가지로 북·미 관계 개선 및 평화체제 구축 과정과 큰 흐름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의제들의 전망은 기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으므로 6월 이후 상황을 살펴봐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비핵화와 관련하여 남북간의 유사한 합의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사례를 근거로 하여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견해도 있다.

이런 비판을 북한도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4) 역대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관심을 표명했다. 예컨대, DMZ내 평화시(노태우 정부), 자연공원(김영삼 정부), 남북초소와 중화기 철수 및 평화적 이용(노무현 정부), 생태·평화 벨트 조성(이명박 정부), 세계평화공원조성(박근혜 정부) 등이 있다.

로 보인다. 정상회담을 마친 북한은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61장의 관련 화보로 채웠으며, 특히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긴 ‘판문점 선언’ 전문을 북한주민들에게 공개하였다. 이는 비핵화와 관련한 대 주민 설득작업을 끝냈거나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또한, ‘판문점 선언’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과 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대내외적으로 밝힌 측면이 있다.

‘판문점 선언’ 이전에 조선로동당 전원회의를 통하여 대륙간탄도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문서화하였고, 이 문서를 「로동신문」을 통해 재차 보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연장선에서 북·미 정상회담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최근 추이를 바탕으로 제한적이지만 북·미 회담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의 격렬한 한 해가 지나가고 남북한간의 역사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있다” 혹은 “한국전쟁이 종전될 것”이라는 트윗을 한 바 있다. 또한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의 석방 가능성도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 상황의 연장선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남·북·미가 다시 모여서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게 된다면, 북한도 동시에 비핵화에 관한 로드맵을 가동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4. 나가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엄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판문점 선언’과 관련하여 국회의 역할을 정리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국회가 수행해야 할 것이다. 양 정상 간의 선언은 시작일 뿐이며, 이로부터 성과를 거두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넘어서야 할 장애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여·야간 이견을 좁히고 국민적 공감대를 수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초당적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판문점 선언’의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 진행을 위해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안으로 이송할 수도 있고, 1·2차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비준 동의안을 작성하여 국회로 이송할 수도 있다.

정상회담 이전부터 정부는 남북합의사항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혹은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한다면 국회로 비준 동의안을 이송할 것이다.

국회로 동의안이 이송될 경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보여주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